

14. 대구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19년 10월 2일
- 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-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8일
- 상정일자 : 제27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문화복지위원회(2019년 10월 17일)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보건복지국장 백운자)

□ 제안이유

- 「치매관리법」의 일부개정(2018.6.12.)으로 법 제17조에서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<치매안심센터>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, 조례 제7조 ‘통합정신·치매센터의 설치에 관한 규정’을 삭제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통합정신·치매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 삭제(안 제7조)

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김창업)

□ 검토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치매관리법」의 개정으로 <치매상담센터>가 <치매안심센터>로 바뀌고 그 기능이 추가되어,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만으로 업무 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, 상위법과 명칭에 차이가 있는 조례 제7조(통합정신·치매센터의 설치 등)를 삭제하려는 것으로,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-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이 강화되고 있으며, 이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치매안심센터 등을 설치하여 치매 관련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-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환자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만큼, 치매로 인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시설보호 차원을 넘어 치매 인식개선, 예방, 조기진단 및 단계별 치료 등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하겠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	의	답	변
치매환자가 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데, 사전에 검사하는데 비용이 드는지?		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으며, 확진 판정을 받을 때는 병원에 비용을 지불해야 함.	
유전자 검사로 99% 이상 치매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데, 이러한 검사로 정확한 확인이 된다면 관련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음.		검토해 보겠음.	

5. 토론요지

- 없음.

6. 수정안 요지

- 없음.

7. 심사결과

-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.